

화학사고, 관계기간 협조 “엉망”

구미 불산사고, 군부대 지원 거절 ... 경보 조기해제로 피해 가중

감사원은 2012년 9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구미시가 사고를 일으킨 휴브글로벌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 예방조치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2013년 3-4월 구미 불산사고 유출사고 대응실태를 감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2012년 9월27일 오후 6시40분께 경북소방본부는 자체 소방장비와 인력으로는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해 육군 제50사단에 불산 제독작업 지원을 요청했으나 화학테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도 9월27일 오후 11시10분과 9월28일 오전 1시40분 50사단에 화학부대 지원을 요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거절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국방부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접수한 소방방재청의 사고 관련 보고서를 열람하지 않아 대민 지원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환경당국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소방인력이 9월28일 오후 3시30분께 장비 부족으로 제독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철수했으나 환경부는 제독 작업 및 잔류오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해제했다.

경보가 해제되자 구미시는 바로 주민복귀를 결정해 2차 피해가 커졌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사고수습의 관제탑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도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해 공조체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

또 구미시는 5000톤 이상의 유독물질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휴브글로벌이 불산 생산량을 4800톤으로 신고해 검사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구미시는 경상북도가 2011년과 2012년 휴브글로벌의 불산 생산량이 5000톤 이상이라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생산량에 관계없이 실시하고 있는 유독물 생산기업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도 2008-2012년 한차례만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구미시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관련부처에 주의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15>